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71
----------	------

발의연월일 : 2021. 2. 24.

발 의 자 : 설 훈 · 김민철 · 이규민
김홍걸 · 박영순 · 전해숙
윤재갑 · 정청래 · 오영환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72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과 재외동포들의 요구 등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이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한다.

제3조(재외동포재단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

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외동포재단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4조(재외동포재단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외동

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 안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다.

제6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특례) ① 재외동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준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력경쟁채용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소요 근무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직원이 임용되는 공무원의 직급을 정할 때에는 재외동포재단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체계와 비교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종전의 재외동포재단 직원이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되어 호봉·수당·경력평정·최저승진소요연수·연가일수 등의 산정을 위한 근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인정한다.

⑤ 그 밖에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직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가보훈처장 및 병무청장의 소관 사무 중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및 병무청의 소속 공무원 중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외동포청장이 승계하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가보훈처장 및 병무청장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가보훈처장 및 병무청장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재외동포청장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외동포

청장이 승계하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및 “병무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을, “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가보훈처장” 및 “병무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외교부) ①·② (생략)	제30조(외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 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u>
<u><신 설></u>	<u>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 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u>